의 정 정 보

2005 - 7호 4. 22.

이 자료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새로운 시책 및 동향과 최근 법령 제·개정, 입법예고된 자료를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 중앙기관 정보 1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 4
- 새 법령 소식 6

<부록> 행복한 책읽기 · · · · · · · · · · · · · · 8

의회자료실 안내 및 금언 뒷면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실 ☎ (042)606-5021~3

중앙기관 정보

혁신관리수석 신설, 국방보좌관은 폐지(청와대)

○ 청와대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국방보좌관을 공식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보좌관은 '6수석 5보좌관'에서 '7수석 4보좌관'이 된다. 혁신관리수석은 혁신관리비서관, 민원제안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휘하고 정부 혁신운동을 총괄한다.

재산세개혁 역행 지자체에 재정 페널티(행정자치부)

○ 금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개편의 근본 목적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실현으로 형평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으로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 인하조례 개정 움직임은 이러한 조세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것.

○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동일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납세자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 새로운 조세 불형평 야기, 외부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세부담 불형평으로 인한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요구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

자치경찰제 시범실시(행정자치부)

○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말에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올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6,000명이상이 될 전망이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

○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으로 오는 5월중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지역신문발전기금 신설(행정자치부)

○ 지방신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고 250억원을 투입,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설한다.

○ 이 기금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기사 취재 지원, 낙후설비 교체자금 대출, 첨단정보통신 시스템 도입 등에 지원된다.

○ 정부는 올해 국무회의를 열어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향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나설 계획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열린우리당 김성호의원 대표 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까지 국고지원금,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회, 정부 및 NGO 등의 최근동향

`1특별시·60개 광역시' 설치 검토(열린우리당,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은 18일 지방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현재 3단계로 돼있는 행정체제를 축소, 도(道)를 없애고 대신 전국을 1개 특별시와 100만명 이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

○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중앙과 시.군.구 주민간 의사전달 왜곡 등으로 인해 지방행정 개편이 필요하나 이는 매우 중요하고 큰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각 당과 정치권이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검토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

○ 한나라당 역시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3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지자체 3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

공무원 정년차별 차별철폐 요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나

○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직급별로 직무내용이 다르고, 직무내용에 따라 정부 인력을 차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힘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정년차별 철폐를 촉구할 계획

경기 영어마을 가족캠프 충남도민 공동이용(충청남도)

-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 후속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지난 1월27일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경기영어마을 「주말가족반 영어캠프」 프로그램에 충남도민이 함께 공동 활용하는 사업이 오는 16일부터 연중 실시된다.

○ 주말가족반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자녀들은 영어로 말하며 친구들과 친해지는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며 자신감을 배양하고, 학부모들은 향후 자녀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어교육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된다.

○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경기영어마을'에서 매주 주말에 40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 충남도민은 매주 8가족씩 입교할 수 있게 되며 입소비용은 1인당 3만원(경기도민과 동일)이 소요됨.

토·휴일당직수당 2만원 인상(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가 토요일과 공휴일에 지급해 온 당직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6%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市는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에 구분없이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토·공휴일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평일은 기존대로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함

※ 논산시, 당진군 : 토·공휴일(5만원), 평일(3만원)
아산시 : 평일과 토·공휴일 모두(4만원)

아웃소싱 확대(서울시 강남구)

○ 서울 강남구는 최근 외부 전문기관인 리서치&리서치에 의뢰, 분석한 결과 민선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70개 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최소 2%에서 최대 214%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둠

○ 지난 1994년 이후 청소, 주차관리, 무허가 건물 단속 등 무려 70개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 예산절감뿐 아니라 인력은 업무당 1명에서 9명까지 감소하는 효과와 행정업무의 추진실적도 55%에서 114%로 증가했으며 특히, 무허가 건물 단속 등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규제업무의 능률성은 244%내지 299%나 증가하였고 주민만족도에서 크게 향상되었음

○ 강남구는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법인 서면신고 조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조업무, 병충해 방제사업, 구급차 지원, 방역소독 인력운영 등의 업무도 아웃소싱을 활용할 방침.

영유아보육시설 정보화(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u-City 사회를 위한 보육 정보화 준비를 위하여

- 정보통신부의 시범사업인 유비넷 컨소시엄에 SK텔레콤, 충청방송과 함께 참여하여 올 7월에 관내 보육시설 10곳을 선정 디지털TV, 셋톱박스, 컴퓨터를 보급하고 동영상 멀티미디어, 인터넷, 영상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 아울러 은행동의 보육정보센터 건물을 IPv6(차세대 인터넷) 전용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새 법령 소식

최근 제·개정된 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05. 4. 13 공포)

○ 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
- 일반공사 : 50억원 이하 → 70억원 이하로
- 전문공사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로 상향조정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
-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정부조달에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조정
- 건설기술용역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은「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대상기관인 특별시·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도의 경우「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조정

○ 지역사업자 기준의 명확화
- 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

최근 입법예고된 법령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05. 4. 6 중앙인사위원장)

○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 구성
-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등에 임용되어 인사관리 되는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통합하여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계급 폐지

-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치 아니함.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 대상 축소 등 심의·의결 사항 조정

- 現行 인사심사 대상을 1~3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시에서 →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신규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시에만 거치도록 함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분류 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과 관계없이 풀(pool)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토록 함.

- 공모직위의 근거 규정 신설 및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05. 4. 9 행자부장관)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

- 심의회구성 : 9人이상 13인이하 위원(위원장·부위원장 각1인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 보고 및 승인 관련규정(삭제/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관련 상급기관 보고규정 삭제

- 사업소 설치에 관한 행자부장관의 승인제도 삭제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외에 주무부장관에게도 보고

- 위법한 조례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시 공보, 인터넷 등에 공시